

#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계보와 '다케가와-타다 논쟁'

- 동아시아 비교연구의 과제 -

김 성 원\*

(2009.6.1. 접수 / 2009.6.18. 1차수정 / 2009.6.29. 게재확정)

- 요약 -

최근 일본국내에서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다케가와-타다 논쟁'이라고 불리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되어 온 복지국가연구의 두 가지 큰 흐름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두 가지 연구조류를 검토함으로써 '다케가와-타다 논쟁'이 제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방법론적 논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1절에서는 '다케가와-타다 논쟁'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 논쟁이 지금까지의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본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단계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연구조류의 특징과 내용을 확인한다. 제3절에서는 두 연구조류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를 살펴보고, 거기서 도출되는 논점

---

\* 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wonn45@hotmail.com)

으로부터 '다케가와-타다 논쟁'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두 가지 연구조류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앞으로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논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주제어 : 비교복지국가연구, 동아시아 복지국가,  
'다케가와-타다 논쟁', 단계론적 접근, 유형론적 접근

# 1. ‘다케가와-타다 논쟁’

## 1) 논쟁의 의미

1990년대 후반 이후 비교복지국가연구 분야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 혹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비교연구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동아시아 연구의 등장이 지금까지 주로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복지국가연구의 사정범위를 넓히는데 크게 공헌해 온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충분히 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복지국가의 비교분석을 하면서도 그 분석대상인 '복지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연구의 출발점에서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라는 분석대상='복지국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분석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정당성을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지적되는 것이다(田多, 2007(a); 金成垣, 2008).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생각하면 최근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가 비교분석으로서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한계를 생각할 때 최근 일본 국내에서 발표된 다음 4개의 논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2)</sup>.

- ①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 2005(a). "한국의 복지국가형성과 복지국가의 국제비교."

---

1) 최근 일본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3절에서 소개하고 있다.

2) 이하의 논문 출처는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 ② 타다 히데노리(田多英範). 2007(b). "일본의 복지국가화와 한국의 복지국가화.
- ③ 다케가와 쇼고. 2007. 한일비교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론: 타다 히데노리의 비판에 대하여."
- ④ 타다 히데노리. 2008. "복지국가의 형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다케가와 쇼고의 반론에 대하여."

우선 논문 ①에서 다케가와와는 1990년대 말 한국이 경험한 급속한 복지국가화에 주목하여 이를 일본과 유럽의 경험과 비교 설명하면서 국제비교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일본, 영국의 복지국가 형성시기와 각각의 시기에 보인 국제환경의 차이에 주목하여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유형론과는 다른 의미의 세 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1940년대에 복지국가 형성을 경험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E-type', 1970년대 초반에 복지국가 형성을 경험한 일본을 'J-type',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복지국가 형성을 경험한 한국을 'K-type'으로 유형화 하면서 각각의 시기에 나타난 국제환경을 중심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해 내고 있다. 복지국가 형성시기를 근거로 한 이 새로운 '세 가지 세계'론이 다케가와 논문의 핵심 주제이다. 논문 ②에서 타다는 다케가와와의 논의에 대한 논평을 전개한다. 이 논문에서 타다가 문제시하는 것은 다케가와 논문의 핵심 주제인 새로운 '세 가지 세계'론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 형성시기에 관한 것이다. 특히 타다는 복지지출의 '양적 변화'를 기준으로 한 다케가와와의 복지국가 형성시기에 대한 판단을 비판하면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통합' 혹은 '유기적 결합'이라는 제도의 '질적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시민권(=생존권)의 보장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형성시기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타다의 기준에서 보면 일본 복지국

3) 본 논문의 제2절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타다의 복지국가 성립론, 특히 공공

가의 형성시기는 다케가와가 말하는 1870년대 초가 아니라 1950년대 말이 된다. 논문 ③에서 다케가와가 자신의 '세 가지 세계'론 이론적 의의를 재확인하면서 복지국가 형성시기를 파악하는 기준에 관한 타다의 문제제기에 반론을 전개한다. 논문 ④는 이에 대한 타다의 재반론이다.

'다케가와-타다 논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의 네 개의 논문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시기를 둘러싼 논의인데, 당연히 그 안에는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혹은 '복지국가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복지국가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묻는 중요한 문제제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비교분석의 대상=복지국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논점이 되어, 거기서 출발하여 일본과 한국, 그리고 양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는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논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케가와-타다 논쟁'이 제시하는 논점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호토론과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조만간에 한일 양국에서 발표될 예정이다(金成垣編 2009근간예정)<sup>4)</sup>.

그런데 '다케가와-타다 논쟁'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점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다케가와-타다 논쟁'이 지금까지 일본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복지국가연구의 몇 가지 흐름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논쟁이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방법론적 논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한일공동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몇 가지 조류와 그 합류라는 점에

---

부조와 사회보험의 '통합' 혹은 '유기적 결합'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田多, 1994=2007).

4) 이 연구 성과는 한일양국의 공동출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 10월 출판이 확정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9년 12월경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보다 초점을 두면서 '다케가와-타다 논쟁'의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논쟁이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방법론적 논점의 탐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논쟁이 일어나기까지

일본은 서구국가들에 비교하여 늦게 복지국가화를 경험한 나라이다. 최근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전까지 일본국내의 비교 복지국가연구 경향을 보면, 거기서 주된 비교대상은 당연히 스웨덴이나 독일 혹은 영국 등의 서구선진복지국가들이었다. 이들 국가의 경험과 이론에 비추어 일본이 '복지국가인가 아닌가?' 혹은 '어떠한 복지국가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원래 복지국가의 비교분석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일본의 복지국가연구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전자를 '복지국가는 언제 무엇을 가지고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가?'라는 '종(縱)의' 동태론 혹은 단계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하다면, 후자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형태는 어떻게 발생하며, 이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라는 '횡(橫)의' 유형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조류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일본에서 이 두 가지 연구조류는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시대적 배경이나 학문적 전통이 달라 최근까지 서로 관계없이 다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일본보다 늦게 복지국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본 복지국가연구는 서구중심에서 벗어나 이웃 국가들에게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학문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시기에 복지국가를 경험해 온 일본은 서구와 일본에 관한 종래의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면서 동

아시아를 연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동아시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서로 다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위의 두 가지 연구조류에 접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다케가와-타다 논쟁'이 그 접점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위 두 가지 연구조류를 검토하는 작업이 '다케가와-타다 논쟁'이 제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방법론적 논점에도 중요한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두 가지 조류를 검토함으로써 그 접점의 출발점으로서 '다케가와-타다 논쟁'이 갖는 의미와 의의를 밝히고, 이를 통해 '다케가와-타다 논쟁'이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방법론적 논점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하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보이는 두 가지 연구조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 연구조류의 접점으로서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를 검토하면서 거기서 도출되는 논점을 통해 '다케가와-타다 논쟁'의 의미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두 가지 연구조류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과제를 논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2.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계보: 두 가지 조류

일본에서 사회정책이나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매우 길다. 하지만 '복지국가'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 그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이다.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분수령은 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복지국가』 시리즈(전6권)이라고 말해지는데, 이 시리즈가 출판된 것이

1984-5년이므로 일본 복지국가연구는 그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출판에 대해 오카모토 히데오(岡本 英男)가 "그 시기까지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전문가에 의해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을 비롯한 일본의 사회과학이 전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岡本, 2007: 16), 1980년대 전반 일본에서 긴 역사와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이 분야에 들어오면서 복지국가연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오카모토의 인용문을 보면 지금까지 일본 복지국가연구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주된 문제관심인 자본주의연구에서 출발한 복지국가연구이고, 또 하나는 그것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연구에서 출발한 복지국가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논의전개의 편의상 전자를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 그리고 후자를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이라고 부르겠다. 이하 각각의 접근법에 의한 복지국가연구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

### (1) 자본주의연구에서 복지국가연구로

일본의 마르크스 경제학이 복지국가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지만 복지국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 보다 빠르다.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 전후부터 자본주의의 복지국가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혹은 '현대자본주의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大内, 1970; 加藤, 1974=2006; 岡本, 2007).



이 현대자본주의론의 주된 문제관심은 20세기 전반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경험 속에서 체제위기에 빠진 자본주의가 이전과는 다른 특질을 갖는 이른바 '현대(20세기)자본주의'로 성립되는 과정이었다. 초창기에는 체제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가 자본주의를 조직화해가는 현상에 주목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현대자본주의의 특질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大内, 1970). 그러나 연구가 점차 진행되면서 현대자본주의의 본질을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유착에서 찾는 정통파 마르크스주의학설과는 달리, 이른바 '이율배반'론<sup>5)</sup>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내부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한 체제, 혹은 '반혁명체제'로서의 현대자본주의의 특질을 분석하거나(加藤, 1974=2006: 3-18; 112-121), 그 성립과정을 '탈자본주의화' 과정으로 설명하는 논의가 보다 유효성을 갖게 되었다(關根, 1974). 그리고 그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자본주의 그 자체를 '복지자본주의' 혹은 '복지국가'로 파악하는 논의가 힘을 얻게 되어 '복지국가론'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오카모토의 말을 빌리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 복지국가론으로"(岡本, 2007;11-15)의 과정이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복지국가』 시리즈는 이 과정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6권 중 전반부 3권에서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

5) 가토는 자본주의가 그 존속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요소를 내부에 도입하는 자기모순적인 요청, 다시 말해 '이율배반'적인 과제에 직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加藤, 1974=2006: 16). 즉 임금의 하방편직성=이윤억압을 초래하는 노동기본권의 승인이 요청되는 한편, 자본주의체제로서 존속하는 이상 자본축적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제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 복지국가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통해 오우치 치카라(大内力, 1970)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판,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으며, 후반부 3권에서는 일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제적인 종합연구를 추구하면서 각국의 상황과 그 비교에 대해 경제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로부터의 분석이 여러 장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리즈는 주로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수 년 후에 간행된 『전환기의 복지국가 상·하』(1988)에서는 '복지국가 위기'이후의 재편과정에 대해 유럽과 미국(상), 그리고 일본(하)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복지국가』 시리즈와 『전환기의 복지국가』 시리즈는 당시 일본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단 이 시리즈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사회복지연구자 혹은 사회학자와 근대경제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때문에 그 시리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연구가 마르크스 경제학에 근거한 복지국가연구였다고는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 의한 복지국가연구의 핵심은 가토 에이치(加藤榮一, 1974=2006; 1978=2006; 1987=2006; 1988=2007), 하야시 켄큐(林建久 1992), 타다 히데노리(田多英範, 1994)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하 이들 연구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자.

## (2) '단계론'에 근거한 복지국가연구

### ①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 의한 복지국가연구의 특징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岡本 2007:18-32)<sup>6)</sup>, 여기에서는 뒤에서 살

---

6)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의 특징은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관계만으로는 모두 설명될 수는 없다. 원래 이 접근법에 의한 복지국가연구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근거한 자본주의 분석이 그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논점은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제도, 보조금제도, 세제 등에 의한 중소기업보호정책, 농민보호정책 등 광의의 제도영역을 포섭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뒤에서 언급할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

펴볼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과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복지국가와 그 핵심요소인 사회보장제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가토의 경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인식하는 '체보론'<sup>7)</sup>적 인식을 거부하며(加藤, 1978=2006: 79-98), 하야시와 타다의 경우 사회보장 혹은 사회 복지제도를 복지국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서구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는데(林, 1992:1-6; 田多, 1994: 1-25),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 의한 복지국가연구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유무가 아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복지국가의 핵심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과거의 유사한 제도와는 다른 성격과 의의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20세기 이전에도 구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았으며, 또 특정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 국가들을 복지국가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뒤에서 다시 살

---

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오카모토는 본논문에서 말한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 의한 복지국가연구의 특징을 ①복지국가의 단계론적 파악, ②광의의 복지국가론, ③시스템으로서의 복지국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岡本, 2007: 제1장).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그의 저서를 참조 바란다.

- 7) 오카다 토모요시(岡田与好)는 영국의 '19세기행정개혁론'을 분석하면서 우노·단계론의 재검토를 주장한다. 즉 복지국가의 역사를 분석함에 있어 "자유주의 단계의 결과로서가 아닌 그 단계 속에서 이미 자유주의와-대립물로서가 아닌-병행해서 출현한 근대적인 국가행정구조와 국가행동"을 간파해서는 된다고 하면서, 19세기의 자본주의와 20세기의 복지자본주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우노·단계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岡田, 1976). 이에 대해 가토는 아담 스미스의 연구를 재검토하면서 "19세기 중반의 노동운동이나 사회개혁운동 자체가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오카다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을 전개했다(加藤, 1978=2006: 96).

펴보겠지만 가토의 경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동권화(同權化) 과정을 통해, 하야시의 경우는 국가재정의 불연속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타다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생존권이 보장되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복지국가 형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통해 과거의 유사한 제도와는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탄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구빈법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동권화 혹은 국가재정의 불연속,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니 그 반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복지국가인가 아닌가?' 혹은 '언제 무엇을 가지고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단계론'적인 역사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론'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그들은 20세기 복지국가체제 하에서의 사회보장제도와 19세기 자유방임·야경국가체제에서의 유사한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또 이들 두 체제 하에서의 국가역할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계보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론'적 인식에 의한 복지국가연구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

## ② 복지국가연구의 내용

일본의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인 우노(宇野)이론을 수정한 '복지국가화사관(福祉國家化史觀)'을 전개하고 있는 가토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발전의 하나의 단계로 파악하면서 그 역사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복지국가화> 경향을 그 이전의 <순수자본주의화> 경향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동권화를 핵심에 두면서 그

두 가지 경향의 역사적 전환을 분석하고 있다(加藤, 1987=2006: 137-197). 그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그 생성의 단서는 19세기 말 이른바 대불황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복지국가가 비약적인 발전의 기초를 형성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격동의 30년'이며,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 그것이 전면 개화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加藤, 1988=2007: 128). 이러한 가토의 복지국가에 대한 시기구분이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파악하는 '계보론적 인식에 근거한 복지국가기원설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명확하다.

한편 하야시도 복지국가에 대한 '단계론'적 파악을 취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복지국가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국가에 대항하여 출현한 자본주의국가의 총체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가토의 복지국가론과 일치한다. 단 하야시의 경우는 국가론으로서의 복지국가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이유에서 국가재정 특히 사회(복지)비와 군사비의 동향과 특징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독일과 영국에서 재정의 총지출과 사회복지비 비율에 불연속적인 변화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 그들 국가에서 양대전기(兩大戰期)에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같은 근거로 미국에서는 뉴딜기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林, 1992: 111-114; 126-132).

타다는 주로 일본의 복지국가를 분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국제비교를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논의 속에서 위의 가토나 하야시와 유사한 견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20세기의 현대자본주의를 '복지국가자본주의'로 명명하면서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 혹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 각국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대량실업과 그에 따른 체제위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는 복지국가의 핵심원리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 혹은 '유기적 관련'<sup>8)</sup>에 의한 생존권 보장에서 찾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과 영국, 대공황 후의 미국,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을 통한 생존권이 승인되면서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田多, 1994: 9-24).

위와 같이 가토의 노동자계급의 동권화에 주목하는 연구, 하야시의 국가재정의 불연속을 중시하는 연구, 또 타다의 생존권 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에서 보이듯이, 본 논문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의 핵심요소인 사회보장제도가 기존의 유사한 제도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20세기의 이른바 현대자본주의=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이전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게 되던 것을 각각의 기준에 근거하여 논증하면서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형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론'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각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동태를 분석하면서 국제비교를 행하고 있다.

이상이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의 핵심 논점인데, 이 '단계론'적인 인식에 근거한 복지국가연구는 서구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연구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하야시의 다음의 같은 지적에서 알 수 있다.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를 복지국가와 동등하게 파악하는 서구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복지·사회보장의 범위는 연구자들에 따라 그 폭이 매우 넓지만 많은 문헌·용례에서 그것과 복지국가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지국가론이라고 표현할 수 없으며 복지제도론 혹은 사회보장론이라는 명칭으로 충분할 것이다"(林, 1992:

---

8) 주3)참조.

하야시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 근거한 많은 문헌에서 비슷한 견해가 발견되는 것을 생각하면<sup>9)</sup> 그 실태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확실히 윌렌스키(Wilensky, 1975), 티트머스(Titmuss, 1964), 플로라(Flora, 1986) 등 서구를 대표하는 복지국가연구를 살펴보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등의 제도 발전과 그 지출의 양적규모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복지국가의 역사적 진개를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에서 살펴볼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을 보면 이들을 포함한 서구의 복지국가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 2)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

### (1) 사회보장·복지연구에서 복지국가연구로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 비교할 때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에서는 복지국가를 분석함에 있어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 자체의 비중이 크거나 혹은 그에 대한 관심이 전면에 등장한다. 단 일본국내의 연구 상황을 보면 그들 제도에 관한 연구가 바로 복지국가연구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복지국가』 시리즈의 서론에서 도하라 시로(戸原四郎)가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의 다양한 분야 중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때문에 그들 연구가 사회과학의 주류가 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東京大學社會科學研

9) 예를 들어 하야시(林, 1992:3)나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편(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1984:10), 그리고 타다(田多, 1994:18), 미와(三和, 2000)에 유사한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究所編, 1984: 27), 실제로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에 의한 복지국가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여기에는 서구의 복지국가연구가 기존의 윌렌스키나 티트머스의 연구에서 보인 단선적 비교분석을 넘어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 1999)의 유형론으로 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주지하는 것처럼 윌렌스키의 경우, 사회지출의 양적 측면과 제도정비의 수준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복지선진국'과 '복지후진국'이라는 유형을 도출하였다(Wilensky, 1975). 티트머스의 경우도 유사한 의미에서 '제도적 재분배 모델'과 '잔여적 모델'이라는 유형으로 복지국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Titmuss, 1964). 이들 기준에 따라 경우 일본은 사회지출과 제도정비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복지후진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일본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연구에 있어서 적극적인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우즈하시 다카후미(埋橋孝文)가 지적하는 것처럼 1990년대 이전의 연구는 "특정 국가(특히 구미제국)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러한 연구에서 일본은 암묵적으로 '후진국'이라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埋橋, 1997: 7-8).

하지만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이 등장한 이후 그가 제시한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에 근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졌다(Esping-Andersen, 1990; 1999). 복지체제론에서는 사회지출이나 제도정비의 수준 등 국가 간의 '양적 차이' 뿐만 아니라 복지의 생산과 분배의 방식, 그리고 복지 지출과 제도의 '질적 차이'가 강조된다. 그는 상품화와 계층화라는 지표에 근거하여 복지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국가, 시장, 가족의 삼자간 비중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본에 대해서도 유럽에 비교하여 '양적으로 수준



이 낮다'라는 단선적인 인식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다'는 유형론적인 인식이 작용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이 등장한 이후,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국내에서 구미제국과 일본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자본주의의 국제비교』(埋橋, 1997)나 『비교복지국가론』(岡澤・宮本編, 1997)를 시작으로 『복지국가로의 시좌』(大山・炭谷・武川・平岡, 2000), 『복지국가의 사회학』(三重野偏, 2001), 『일본형 복지레짐의 전개와 변용』(新川, 2005) 등 복지국가를 타이틀로 하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그러한 과정에서 『강좌・복지국가의 행방』 시리즈 전 5권 (2002~2004) 과 같은 대규모의 공동연구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서 살펴본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는 다른 흐름의 복지국가 연구가 전개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보장·복지론에서 복지국가론으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론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분석 대상이나 관점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힘들다. 단 이들 연구에서 보이는 방법론적 틀이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 구별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 (2) '유형론'에 근거한 복지국가연구

### ①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 비교해서 살펴볼 때 사회보장·복지 연구로부터의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혹은 '언제 무엇을 가지고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복지국가에 대한 '단계론'적 인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국

가와 사회보장제도의 관계에서 보면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에서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도로 구성된 복지국가가 '소여(所與: 이미 주어진)의 존재'로서 전제되어 그 다양한 제도영역의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접근법에서 보이는 차이는 다케가와가 "한 나라가 복지국가인가 아니가 보다는 어떠한 복지국가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나(武川, 2000: 29)<sup>10)</sup>, 우즈하시가 "각 복지국가가 어떻게 비교 분류되어 그룹화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고 하는 대립축이 의미가 없어진 오늘날, 새로운 지적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埋橋, 1997: 7)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갖는 복지국가연구에서는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는 달리, 연구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의 존재가 이미 전제되어 이에 대한 '유형론'적 파악을 통한 횡단적인 국제비교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론'적 인식에 의한 복지국가연구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

## ② 복지국가연구의 내용

가장 빠른 시기에 이와 같은 문제관심을 가지고 행해진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성과로서 1997년 우즈하시의 『복지국가의 국제비교: 일본의 위치와 전망』을 들 수 있다. 그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아동과 가족정책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영역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특징을 밝혀내고 있다. 분석결과로서 에스핑 앤더슨의 기준에

---

10) 단 이러한 다케가와와 언급은 "오늘날 선진사회의 국가는 정부의 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20세기 초두의 국가와는 달리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해둔 것이다(武川, 2000: 29). 이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케가와가 복지국가에 대한 단계론적 인식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근거하여 보수주의체제와 자유주의체제의 '혼합형(hybrid)'이라는 특징을 도출해내고 있다. 단 완전고용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보면 사민주의체제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이러한 여러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일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즈음 에스핑 앤더슨의 지표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서구와는 다른 일본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 성과가 등장하기 줄지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즈하시의 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복지체제의 기계적 적용을 통해 확인되는 '혼합형'이라는 '애매한 특징'이 문제가 되면서 일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의 응용·보완을 통한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 2005(b))와 신카와 토시미츠(新川敏光, 2005),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 2008), 오사와 마리(大澤真理, 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복지체제론이 갖는 역사적·구조적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기계적 적용을 문제시하고 있는 다케가와와는 복지정치·급여국가·규제국가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 새로운 분석틀을 설정하여 일본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축에 대응한 일본의 특징으로 '약한 사회민주주의와 강한 국가관료제', '낮은 사회지출과 높은 공공사업비', '약한 사회규제와 강한 경제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신카와는 복지체제론의 탈상품화와 계층화 지표를 교차시켜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유형에 더해 '가족주의체제'라는 제4유형을 추가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사회지출, 사회보장제도, 기업복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일본(과 남유럽, 스위스 아일랜드)에 대해 탈상품화 정도가 낮고, 계층화가 높고, 노동시장의 여성의존도가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제4유형 즉 '가족주의체제'에 속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新川, 2005: 271-279).

미야모토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론과 최근의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 VOC)론의 근거가 되는 생산체제론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이 두 체제론의 결합을 통해 일본 복지국가의 특징을 설명해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복지체제론에서 보면 자유주의체제와 보수주의체제가 혼합된 특징을 갖지만, 여기에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대체적 관계'에 주목해야한다고 한다. 즉 일본의 경우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정책과 낮은 실업률로 상징되는 고용·노동시장=생산체제가 국가복지=복지체제의 기능을 대신해 왔으며, 이것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형이라고 하는 특징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사와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의 이론적·경험적 문제를 지적한 후에 젠더관점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세 가지 유형으로서 '남성세대주'형(대륙유럽제국과 일본), '양립지원'형(북유럽제국), '시장지향'형(앵글로색슨제국)을 도출하고 있다. 오사와가 지적하는 것처럼 젠더관점을 도입한 새로운 유형화 작업은 복지체제론과는 달리 일본을 "복수유형의 절충이 아니라 전형(典型)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大澤, 2007: 54), 이러한 문제의식과 시도는 앞서 언급한 다케가와와 신카와, 미야모토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며,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복지국가연구 전반에 공유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에 의한 복지국가연구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 접근법에서는 복지국가를 분석함에 있어 '복지국가인가 아닌가?'라는 '단계론'적인 인식은 뒤로 후퇴하고 출발점에서 '소여의 존재로서의 복지국가'가 전제되어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제도영역의 분석을 통해 그 다양한 형태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이 '유형론'적 인식에 근거하여 서구와 일본 복지국가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과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 사이에 이론적인 접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sup>11)</sup>. 하지만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이, '단계론'에 근거하여 복지국가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는 달리 사회보장·복지제도로 구성된 복지국가를 '소여의 존재'로 상정하면서 이에 대한 '유형론'적 파악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명확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때문에 복지국가가 대처해야 할 문제군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와 밀접한 노동문제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생활문제나 젠더 문제까지 포함한 다방면의 사회문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

11) 두 접근법의 이론적 접점을 탐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노이론에 의거하는 단계론에서도, 에스핑 앤더슨에 의거하는 유형론에서도 '상품화' / '탈상품화'라는 개념이 복지국가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이 개념을 중심으로 두 접근법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 단 두 접근법에서 보이는 '상품화' / '탈상품화'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노이론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파악할 때 '순수자본주의화 경향'과 '복지국가화 경향'의 구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품영역만이 존재했던 19세기 자본주의와 비상상품영역을 포함한 20세기 자본주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에스핑 앤더슨이 의거하는 폴란니의 논의를 보면 19세기 자유주의의 자본주의 단계에서도 상품영역과 비상상품영역이 병존했다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노이론에서 말하는 <순수자본주의화>라는 역사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사회주의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비상상품적 인 요소를 자본주의국가가 흡수하였다고 하는 우노이론의 인식이 폴란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양 논의에서 동일한 용어가 쓰이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제하는 자본주의의 역사인식에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VOD)론도 두 접근법의 접점을 탐구하는데 유효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VOC론은 주로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에 주목하는 복지체제론과는 달리, 이들 제도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직업훈련 및 교육, 기업간관계 등 이른바 '생산체제'에 주목하면서 양 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한다. VOC론이 생산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경제시스템을 중시하면서 이와 복지체제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매개로 두 접근법의 접점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계보를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복지국가에 대한 '단계론'적 파악과 '유형론'적 파악이라는 특징을 갖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지금까지 일본의 복지국가연구에서 거의 관련성 없이 전개되어 왔다. 이는 양자 사이에 마르크스 경제학과 서구의 복지국가론이라는 학문적 전통의 차이, 그리고 1970-80년대와 1990년대 후반 이후라고 하는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의 연구 활동 속에서 그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제1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 동아시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 두 가지 접근법 사이에 점점 혹은 교차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를 검토하면서 그 접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합류지점으로서의 동아시아 복지국가 연구

#### 1)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현재

##### (1)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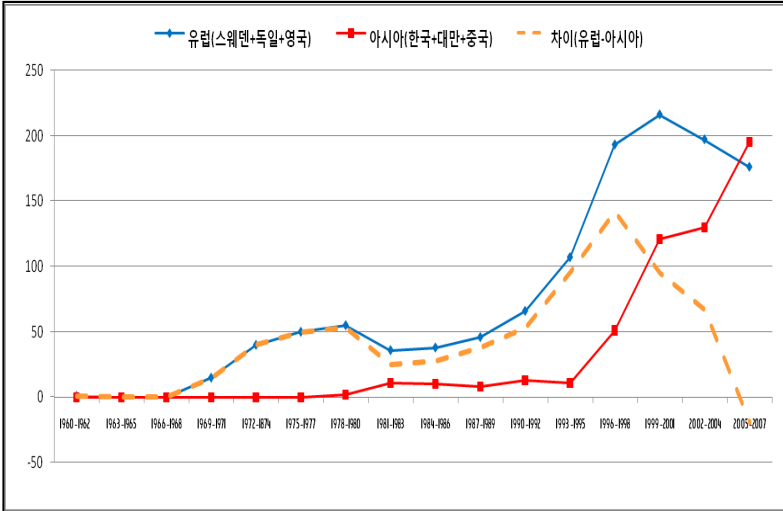
일본국내에 한정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복지국가연구 분야에서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대두된 배경에 1997·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 때에 아시아 각국에서는 실업과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사회보장·복지정책에서도 급격하면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

다. '복지국가의 초고속 확대'가 나타난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대만에서 보인 공공부조와 의료보험의 개혁 등의 정책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면서 학계에서도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발전주의 복지국가'(Kwon ed., 2005), '생산주의 복지자본주의'(Holliday, 2000; Holliday & Wilding eds., 2003), '혼합형 복지레짐'(Esping-Andersen 1990=2001=2006; 1997; 1999) 등 동아시아를 서구의 복지국가와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현실적, 학문적인 상황 변화가 계기가 되어 일본국내에서도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등장하였다. 일본국내에 나타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보면, 단지 '이웃나라에 대한 알아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관심도 있었으며, 서구중심의 연구경향에 대한 반성이라는 학문적인 관심, 그리고 이 학문적 관심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연구를 통해 서구 복지국가연구의 한계를 보완·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관심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2000년대 이후 많은 연구 성과가 등장하였다. 『아시아의 사회보장』(廣井・駒村編, 2003)이나 『신흥복지국가론』(宇佐見編, 2003), 『아시아제국의 복지전략』(大澤編, 2004), 『한국의 복지국가, 일본의 복지국가』(武川・金淵明編, 2005), 『복지레짐의 한일비교』(武川・李惠旻編, 2006), 『동아시아에서의 사회정책학의 전개』(社會政策學會編, 2006), 『후발복지국가론』(金成垣, 2009), 『동아시아의 사회보장』(埋橋・木村・戸谷編, 2009), 『동아시아 복지시스템의 전망』(末廣編, 2009근간예정)등 동아시아 연구가 비교복지국가연구의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정착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그림 1>은 일본의 대표적인 논문데이터베이스에서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대한 연구를 검색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최근 서구에 대한 연구보다 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12)</sup>.

<그림 1> 일본에서의 해외복지연구의 동향(1960-2007년)



주1)검색시스템: FELIX(雜誌記事檢索)

2)검색어: '대상국'+'복지'

## (2) 새로운 비교 축으로서의 '시간 축'

그런데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성과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비교복지국가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국가

12) 일본에서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소개와 전반적인 상황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확고한 이론적 관점과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다케가와-타다 논쟁'을 계기로 보다 이론적이고 공통의 분석틀을 근거로 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들과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 보이는 복지국가전개의 '시간차'라는 문제를 어떻게 비교분석 안에 도입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향은 이른바 시간 축을 포함한 시야의 확대이며 이를 통한 후발복지국가의 이론적 포섭이다"(宮本, 2003: 22).

"후발복지국가, 혹은 신흥복지국가로서의 시간차를 분석틀 안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모델을 생각할 때 하나의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大澤編, 2004: 328).

"동아시아국가들과 또 하나의 후발복지국가인 지중해-남유럽 국가들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하여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세계' 모델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시간 축'의 경제, 사회 구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宮本・イト・埋橋, 2003: 296).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비교복지국가연구를 보면 복지국가전개에 있어서의 '시간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원래 서구국가들의 경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지국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비교연구에서 시간 축의 관점을 도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후에 일본이 늦게 복지국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를 보면 일본을 '예외적 복지국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서 복지국가의 맹아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예외로서의 '일본=개별국가'가 아니라 후발복지국가로서의 '

동아시아=국가군'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가 비교복지국가연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지만 서구의 선발국과 동아시아의 후발국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차'를 비교분석의 변수로서 도입하는 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차'를 배제하여 서구의 복지국가군과 동일선상에서 동아시아를 분석하는 연구 경향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비교분석으로부터는 결국 '혼합형'이라는 '애매한 특징'이 강조되거나 혹은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의 경험과 이론으로 통해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미발달'과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金成垣 2008).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산발적이지만 최근 수 년 간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 속에서 시간 축의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하였다<sup>13)</sup>.

여기서 본 논문의 문제관심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 즉 최근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에는 본 논문에서 말하는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이 대부분인데 이 접근에서는 시간축의 관점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에서는 '복지국가인가 아닌가?'라는

---

13) 복지국가전개에 있어서의 '시간차'에 대한 논의는 보통 '후발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Pierson(2004)). 이 두 가지 개념은 크게 보면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발성의 개념은 서구 선발복지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후발복지국가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한다면, 시간차라는 개념은 서구 선발복지국가들 사이에서의 시간차, 선발복지국가와 후발복지국가들의 시간차, 후발복지국가들 사이에서의 시간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의 '시간차'에 대한 논의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론에 시간축의 시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大澤編, 2004: 327-332). 물론 복지국가의 국제비교연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 축을 도입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 발전이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한 시론적인 논의전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성원(2008: 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단계론'적인 인식이 배제되어 출발점에서 '소여의 존재로서의 복지국가'가 전제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에서 '복지국가인가 아닌가?'가 아닌 '이미 주어진 복지국가가 전제되어 있는 이상 거기에 시간 축을 도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 축의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때문에 실제의 연구 상황을 보더라도 앞 절에서 언급한 일본의 '애매한 특징'이 동아시아 분석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한편에서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전성시대'라고 말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갖는 '단계론'적 인식, 다시 말해 '복지국가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속에는 복지국가를 시간 축에서 파악하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복지국가인가 아닌가?'를 질문하게 되면 20세기 말 혹은 21세기에 복지국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그들의 이론 안에 포함시키기 힘들다는 점이다. 원래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서는 사회주의 붕괴 후의 세계자본주의 시대라는 21세기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파악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치되는 견해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sup>14)</sup>. 특히 20세기 초두의 현대자본주의의 성립과정 속에서 복지국가의 역사적 전개를 분석해 온 이들 연구에서 볼 때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자본주의 속에서 복지국가화를 진행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험은 어떻게 파악될 것인가? 아쉽게도 아직까지 명확한

14) 예를 들어 가토는 198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변화에 대해 “복지국가의 해체”로 파악하고 있으며(加藤, 1991=2007:134-174), 하야시는 “복지국가의 존속”으로 파악하고 있다(林, 1987:200-201).

대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동아시아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 의한 동아시아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소여의 존재로서의 복지국가'를 전제로 하면 동아시아의 경험을 포섭하기 쉽다. 하지만 유형론 속에 시간 축을 도입해야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단계론 속에는 시간 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인가 아닌가'를 물으면 동아시아의 경험을 포섭하기 힘들다. 오늘날 일본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2) '다케가와-타다 논쟁'의 의미의 재검토

이상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 복지국가연구의 계보를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이라는 두 가지 조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전자는 주로 마르크스 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1970-80년대에 진행된 연구조류로, 복지국가에 대한 '단계론'적 파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주로 서구의 복지국가론에 근거를 두고 1990년대 후반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구조류로, 복지국가에 대한 '유형론'적 파악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최근 비교복지국가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를 검토하면서 위의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한 동아시아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은 '단계론'적 인식 속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경험을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은 '유형론'적 인식 속에 어떻게 시간 축을 도입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론적 과제는 어느 한 쪽의 접근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두 접근법을 통합함으로써 그

해결의 가능성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의 처음에 소개한 '다케가와-타다 논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케가와와 새로운 '세 가지 세계론'은 복지국가의 형성시기가 복지국가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시간 축의 관점이 약한 유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세 가지 세계론'의 근거가 되는 복지국가의 형성시기에 대한 타다의 문제제기는 그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일본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단계론'적 파악에 의한 것이다. 즉 '다케가와-타다 논쟁'은 본 논문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며, 두 접근법의 통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연구가 두 접근법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케가와-타다 논쟁'은 그 제1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케가와-타다'논쟁 속에서 나타나는 양자의 견해차이, 즉 복지국가 형성시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동아시아를 분석할 때의 방법론적 유효성 문제를 제외하면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고 하는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방법론적 유효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공동연구의 성과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새로운 복지국가론의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케가와-타다 논쟁'이 보여주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의 방법론적 논점과 관련하여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과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의 공통의 과제를 지적하면서 본 논문의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에서 요구되고 있는 시간 축의 관점에 초점

을 두고 생각해보면 두 접근법의 공통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탐구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복지국가가 직면한 역사적 현실과 관련된 질문인데, 즉 "20세기 공업사회의 고도경제성장기에 복지국가화를 경험해 온 서구의 선발국과는 달리, 21세기 탈공업사회로의 전환기의 저성장시대에 복지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후발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자본주의연구로부터의 접근에서는 세계자본주의 시대의 복지국가에 대한 '단계론'적 파악의 과제가 될 것이며, 사회보장·복지연구로부터의 접근에서는 서구 복지국가 역사적 경험과는 다른 자본주의의 기반 위에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키고 있는 동아시아의 특징에 대한 '유형론'적 파악의 과제가 될 것이다. 비교분석에 있어서의 시간 축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이들 과제에 접근함으로써 두 접근법의 접점에 있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논점을 해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케가와-타다 논쟁'을 이러한 과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인식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의 방법론적 유효성의 탐구를 포함해 논쟁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시켜 가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하면서 여기서 본 논문의 논의를 닫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성원, 2009, "복지국가 전개에 있어서의 `선발국`과 `후발국`: 시간 축의 도입을 통한 비교연구를 위해", 정무권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I*, 인간과 복지.
- 김성원(金成垣)編, 2009(근간예정), *現代の比較福祉國家論: 日韓比較から東アジアへの擴張*, ミネルヴァ書房 (= (한일공동출판), *현대의 비교복지국가론: 한일비교에서 동아시아로의 확장*, 나눔의 집.
- 박형신역, 2006,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일신사.
- 정재철, 라인숙, 김성원역, 2006., *일본의 사회보장: 이론과 분석*, 인간과 복지.
- 가토 에이치(加藤榮一), 1974=2006, "現代資本主義の歴史的位位置: 「反革命」体制の成功とその代価", *現代資本主義と福祉國家*, ミネルヴァ書房.
- \_\_\_\_\_, 1978=2006, "自由主義國家ノート", *現代資本主義と國家*, ミネルヴァ書房.
- \_\_\_\_\_, 1987=2006, "福祉國家と社會主義", *現代資本主義と國家*, ミネルヴァ書房.
- \_\_\_\_\_, 1988=2007, "西ドイツ福祉國家のアポリア", *福祉國家システム*, ミネルヴァ書房.
- \_\_\_\_\_, 1991=2007, "福祉國家システムの再編: プライヴァイタイゼーションの歴史的意味", *福祉國家システム*, ミネルヴァ書房.
- 김성원(金成垣), 2008, *後發福祉國家論: 比較のなかの韓國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 2000, "福祉國家と福祉社會の協働: 連帶と承認をめぐる弁証法", *社會政策研究* No. 1.
- \_\_\_\_\_, 2005(a), "韓國の福祉國家形成と福祉國家の國際比較: 福祉資本主義の3つの世界", 武川正吾・金淵明編, *韓國の福祉國家, 日本の福祉國家*, 東信堂, pp.284-300.

- \_\_\_\_\_, 2005(b), "日本の福祉國家レジーム: 福祉政治・給付國家・規制國家", 武川正吾・金淵明編. <韓國の福祉國家, 日本の福祉國家>. 東信堂.
- \_\_\_\_\_, 2007. "日韓比較をとおしてみた福祉國家論: 田多英範氏の批判に答えて", 週刊社會保障 No. 2438. pp.42-47.
-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김연명(金淵明)編, 2005, 韓國의福祉國家, 日本의福祉國家, 東信堂.
-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이혜경(李惠炅)編, 2006, 福祉レジームの日韓比較 社會保障・ジェンダー・労働市場, 東京大學出版會.
-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1984, 福祉國家의福祉國家의形成, 東京大學出版會.
- 미에노 타카시(三重野卓)編, 2001, 福祉國家의社會學 21世紀における可能性を探る, 東信堂.
-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 2003, "福祉レジーム論の展開と課題: 에스핀・안델센을超えて?", 埋橋孝文編, 比較のなかの福祉國家, ネルヴァ書房.
-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 2008, 福祉政治 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有斐閣.
-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이토팡(イト・ペング)・우즈하시 다카후미(埋橋孝文), 2003, "日本型福祉國家の位置と動態." G. 에스핀・안델센編(埋橋孝文監譯), 轉換期の福祉國家, 早稻田大學出版部.
- 사회정책학회(社會政策學會)編, 2006, 東아시아における社會政策學의展開, 法律文化社.
- 세키네 토모히코(關根友彦), 1974, "現代經濟における脫資本主義化傾向", 經濟セミナー, 1974年2月号.
- 스에히로 아키라(末廣)編, 2009(근간예정), 東아시아의福祉시스템의展望 企業內福祉と社會保障制度, ネルヴァ書房.
- 신카와 토시미츠(新川敏光), 2005, 日本型福祉レジーム의發展と変容, ミネルヴァ書房.



- 오사와 마리(大澤眞理), 2007, 現代日本の生活保障システム: 座標とゆくえ, 岩波書店.
- 오사와 마리(大澤眞理)編, 2004, 아시아諸國の福祉戰略, ミネルヴァ書房.
- 오야마 히로시(大山博)·스기타니 시게루(炭谷茂)·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히라오카 코이치(平岡廣一), 2000, 福祉國家への視座: 揺らぎから再構築へ, ミネルヴァ書房.
- 오카다 토모요시(岡田与好), 1976, "自由放任主義と社會改革: 「19世紀行政改革」論争に寄せて", 社會科學研究 No. 27(4).
- 오카모토 히데오(岡本英男), 2007, 福祉國家の可能性, 東京大學出版會.
- 오카자와 노리오(岡澤憲芙)·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編, 1997, 比較福祉國家論: 揺らぎとオルタナティブ, 法律文化社.
- 오코우치 치카라(大内力), 1970, 國家獨占資本主義, 東京大學出版會.
- 우사미 코이치(宇佐見耕一)編, 2003, 新興福祉國家論: 아시아とラテンアメリカの比較研究, 아시아經濟研究所.
- 우즈하시 타카후미(埋橋孝文), 1997, 現代福祉國家の國際比較: 日本モデルの位置づけと展望, 日本評論社.
- 우즈하시 타카후미(埋橋孝文)·기무라 키요미(木村清美)·도타니 히로유키(戸谷裕之)編, 2009, 東アジアの社會福祉: 日本・韓國・台湾の現狀と課題, ナカニシヤ出版.
- 타다 히데노리(田多英範), 1994, 現代日本社會保障論, 光生館.
- 타다 히데노리(田多英範), 2007(a), "東アジア福祉國家論はいかに論じられるべきか", 社會政策學會誌 第18号. pp.66-74.
- \_\_\_\_\_, 2007(b), "日本の福祉國家化と日本の福祉國家化", 週刊社會保障 No.2423. pp.40-45.
- \_\_\_\_\_, 2008, "福祉國家の成立をどう捉えるか", 週刊社會保障 No.2484.
- 하야시 켄큐(林健久), 1987, 財政學講義,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1992, 福祉國家の財政學, 有斐閣.
- 히로이 요시노리(廣井良典)·고마무라(駒村康平)編, 2003, 아시아의社會保障, 東京大學出版會.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일본어번역서) 2001. 岡澤憲英・宮本太郎監譯 《福祉資本主義の3つの世界》. ミネルヴァ書房)
- \_\_\_\_\_, 1997. "Hybrid or Unique?: The Distinctiveness of the Japanese Welfare State Between Europe and Americ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3), pp.179-189.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lora P., 1986, *Growth to Limits: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since World WarII*, Vol.1. deGruyter.
- Holliday I., 2000,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Political Studies* 48(4).
- Holliday I. & Paul Wilding eds., 2003, *Welfare Capitalism in East Asia: Social Policy in the Tiger Economies*, PalgraveMacmillan.
- Kwon H. J. ed., 2005,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Palgrave Macmillan.
- Pierson, C., 2004, "'Late industrializers' and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T. Mkandawire (ed), *Social Policy in a Development Context*, Palgrave Macmillan.
- Titmuss R., 1974, *Social Policy*, Allen and Unwin.
- Wilensky H. L.,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e and Ideological Root of Public Expendi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The studies on welfare state in Japan  
and 'Takegawa-Tada debate'  
: Toward the comparative study on  
East Aian welfare states

Kim, SungWon\*

In recent years, several articles which constitute the debate called 'Takegawa-Tada debate' over a methodology of the comparative study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have been published. The debate has an implication as a contact point of some approaches of the study on welfare state in Japan. This paper, firstly, investigates the genealogy of the studies on welfare state in Japan, and examines the content of two approaches called 'stage-oriented approach' and 'type-oriented approach'. Secondly, the paper explores the study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as a contact point of the two approaches and clarifies the position of 'Takegawa-Tada debate'. Through the above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methodological approach for the comparative study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key words : comparative study of welfare-state,  
East Asian welfare-state, 'Takegawa-Tada debate',

---

\*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wonn45@hotmail.com)

stage-oriented approach, type-oriented approach